

5·18 성폭력·해직 피해 인정될까...보상기준 마련 시급

광주시, 5·18 8차 피해보상 신청 마감...2000여명 접수

보상 범위 기간 확대로 구금·해직·연행 등 피해자들로 폭적

“5·18은 전국서 일어난 물결...국가 책임 증명하고자 신청”

“보상금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자행한 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제8차 피해보상 신청접수 마지막 날인 2일 광주시청 민원실은 5·18 전후로 해직, 구금, 연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로 북적였다.

박재택(63)씨는 “피해 보상 범위가 1980년 5월 18~27일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된다고 해 보상 신청을 하러 왔다”며 “애꿎은 학생들이 1년 유급당하는 등 밝혀지지 않은 5·18 피해가 많다. 이후로도 꾸준한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광주시청에 왔다는 김모(59)씨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해 ‘광주 학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다 3개월 동안 구금당했다.

김씨는 “최근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확산하고 있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보상 신청을 했다”며 “5·18은 광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큰 물결이다.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접수받은 5·18민주화운동 제8차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2일 마무리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마감 일자에 휴일이 겹치고 신청자가 많아 2일까지 연장 접수를 받았다.

이번 피해보상은 기존 5·18관련 사망, 행불자, 상이자, 질병·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수배·연행자에 더해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2일까지 2000여명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성폭력 피해자 25명, 해직자 175명, 학사징계자 182명도 포함됐다. 또 재분류 329명, 사망자 1명, 행방불명자 14명, 상이자 290명 등도 신청 접수했다.

8차 보상 신청자 수는 1차(1990년) 2693명, 2차(1993년) 278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금까지 1~7차 보상을 통틀어 9227명이 신청해 5807명이 보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사실조사반,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애등급판정 분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이달부터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에 따르면 아직까지 신규 신청자인 성폭력 피해자, 해직자,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5·18보상법은 보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해직자 관련 5·18보상법에 제시된 보상안은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학사징계에 관한 기준은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뿐이다.

결국 행안부 보상심의위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 보상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행안부는 아직까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상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나면, 접수된 내용들을 확인한 뒤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 일단 행안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겠다”



2일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5·18 피해 보상 신청을 하러 온 이들이 줄지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고 밝혔다.

보상심의지급기준을 결정하는 행안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구성에 대해서도 편파심사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최근 보상지원위 위원 선정을 완료했는데, 광주시에서 추천한 10명의 인사 중 단 2명만 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광주시에 따르면 총 위원 15명 중 8명은 당연직,

7명은 위촉직이며 이 중 5명은 행안부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선정한 인사로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5·18 관계자는 “위원 선정부터 심사까지, 광주시와 행안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편파 선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상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설 기차표 100% 비대면으로 구입하세요

온라인·전화 등...8~9일 교통약자·10~11일 모든 고객 대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남본부는 “설 명절 기차 승차권을 오는 8일부터 4일간 온라인·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예매 대상 승차권은 설 명절 기간인 다음달 8~12일 운행되는 KTX·ITX·새마을·ITX-마을·무궁화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

예매 첫날인 8~9일은 교통약자(경로·장애·상이·유공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매를 시행한다.

10~11일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

매가 가능하다. 8일(교통약자)과 10일(모든고객)에는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승차권 예매를 실시하고, 9일(교통약자)과 11일(모든고객)에는 전라·호남·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

코레일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경로·장애·상이·유공자를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해 전체 좌석의 20%를 우선 배정했다.

이에 따라 8~9일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

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교통지원대상자인 상이유공자가 전화접수(1544-8545) 또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기간 예약된 승차권은 11일 오후 3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결제기한 내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며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1일 오후 3시부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철회하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운영 정상화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노조)가 폐원을 하기로 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제2요양병원 폐업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광주시가 새로운 수탁자가 없다며 폐

업을 결정한 것은 공공의료로 지켜야 할 시민의 건강권을 뺏아주는 행위”라면서 “광주시의 태도는 정상화 해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광주시에 공익적 적자 보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3자(광주시-전남대병원-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협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

광주 남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8일까지 51개 사업 82명

광주시 남구가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남구는 이달 8일까지 ‘202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총 82명을 선정하며 지역공공체 일자리 분야 37개 사업과 공공근로 분야 14개 사업으로 나뉜다.

사업 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규모가 4억원 이하인 주민이다.

주 15~40시간이며 최저임금(9860원)을 지급한다.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교통비와 간식비, 주·월차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

선발된 주민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며 기간은 사업별로 다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남구청 1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절과는 29일 개별 통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 정책과(607-2676)에 문의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교육 시설부대비로 패딩점퍼 구입이라니...

교육단체, 시교육청에 감사 촉구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시설부대비로 패딩점퍼 등을 구입한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을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광주시교육청 일부 산하기관에서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 명분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을 구

입하는 등 시설부대비를 유용했다”며 “시설부대비를 환수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단체는 “시설부대비는 안전용품이나 출장 여비 등 사업수행 기본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비용”이라면서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 26명은 시설부대비로 지난해 1160만원에 달하는 패딩점퍼 등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근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

위, 중·고교 교복입찰 담합 등 사고가 터지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부당하게 취득한 시설부대비를 환수하고 공공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광역시 의사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유환**

대표전화. 062_529_210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18번길 25(신안동)

2023.01.01 - 2025.12.31
관절전문병원 SPECIALTY HOSPITAL OF KOREA
보건의료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